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4월호 특집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활성화

### 위원회 FOCUS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편

### 위원회 시책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 경찰청 소식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2022년 **4**월

발행일 | 2022년 5월 4일

발행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활성화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복지 포인트 지급 등 후생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제 성공의 열쇠가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과 직결되어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후생복지 지원 관련 △법적 근거 △지원 대상 △'22년 예산 편성 현황 △지원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는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경찰관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후생, 처우 등에 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일 경우 국가로부터 후생·처우 등에 대한 지원을 그대로 받으면서 동시에 시·도로 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법 제35조(예산)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시(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도지사)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시(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시(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부 시·도에서는 「시·도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해당 시·도공무원임을 이유로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 처우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찰법」이 「지방공무원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이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경찰법」 및 「시·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 처우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4. 6. 법제처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밝힌 바 있으며, 나아가 법제처는 112신고 등 일체의 경찰사무에 대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또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시·도지사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2. 4. 6.)**

- ▶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됨
  - 「경찰법」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도 담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경찰공무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 ▶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 역시 시·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임
  -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재정적 지원 등 여부를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됨



### 후생복지 예산 편성 현황 (’22년)

「시·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도경찰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등을 상대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게도 후생복지 등 지원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설명·설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게 복지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기 위한 후생복지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액수는 총 191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이외에도 △건강검진비(강원, 1인당 30만 / 대구, 1인당 25만) △휴양시설이용권(부산, 1인당 20만)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 시·도별 복지 포인트 편성 현황 (’22.4.15.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인당 단가	50만	25만	35만	60만	16만	24만	30만	24만	100만	100만	50만	50만	50만	25만	50만	50만	50만	-
시·도	50만	25만	35만	60만	16만	24만	30만	24만	100만	100만	50만	50만	50만	25만	50만	50만	50만	-
지·파	-	25만	35만	-	16만	24만	30만	24만	50만	50만	-	-	50만	-	-	-	-	-

△대전 및 세종은 복지포인트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경남은 하반기 추경 예정

△강원은 1인당 10만원 증액(총 60만) 추경 심의 중  
△제주는 조례상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



###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지원 방법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대전·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국가 예산집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자 경찰청 시스템(경찰복지포털)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에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도 복지시스템 가입이나 시·도 협약은행 통장·카드 개설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직원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복지포털 포인트 배정 화면(예시)〉

구분	지급	공제	배정액	비고
경찰청 포인트	200,000원	0원	2022.00.00	① 경찰청 복지예산
윤누리전통 포인트	10,000원	0원	2022.00.00	
자치경찰 포인트	300,000원	0원	2022.00.00	② 자치경찰 복지예산
합계	510,000원	0원	총 지급 금액 - 공제 금액 = 510,000원	

이와 같이 현재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범위를 모두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찰법」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시·도의 재정적 상황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지원 내용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경찰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을, 그럼으로써 사기 충만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이 주민에 더 밀접하고, 지역에 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 '21. 6. 29. 행정 수도 세종에서 자치경찰제가 시작되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 6. 29.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 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시민주권, 인권중시 등 6가지 주요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효과성 있는 과제 발굴 및 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하에서는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현안 및 '22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지구대·파출소장을 내 손으로!”, 전국 최초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시행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함에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때 지역 주민과 현장 경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1. 9. 15. 최초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현장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⑨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 절차〉



## “시민이 직접 제안·채택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경찰 시민참여 강화 3대 방안」 추진

’20년 세종시 ‘시민 감동의 해’를 맞아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구성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민참여방안’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 시민참여 강화 3대 방안’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시민참여 강화 3대 방안〉

시민중심 네트워크 ‘옴마루’ 운영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확대 설치	찾아가는 자치경찰 순회설명회 실시
<p><b>시민 역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li> </ul> <p><b>추진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 시민단체(총 회원수 약 47,000명)와 업무협약 체결,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li> </ul>	<p><b>시민 역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이 지역 내 교통 현안에 대해 제언</li> </ul> <p><b>추진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경찰서에 설치되어 분기별 운영되던 것을 세종청으로 통합하여 월 1회 개최, 심의위원에 시민 포함</li> </ul>	<p><b>시민 역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이 자치경찰 정책에 대해 제언</li> </ul> <p><b>추진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자치경찰제 설명 및 의견 청취</li> </ul>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상임화 및 사무국 설치」 추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경찰법」 제36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 등을 위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찰법」 제36조 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 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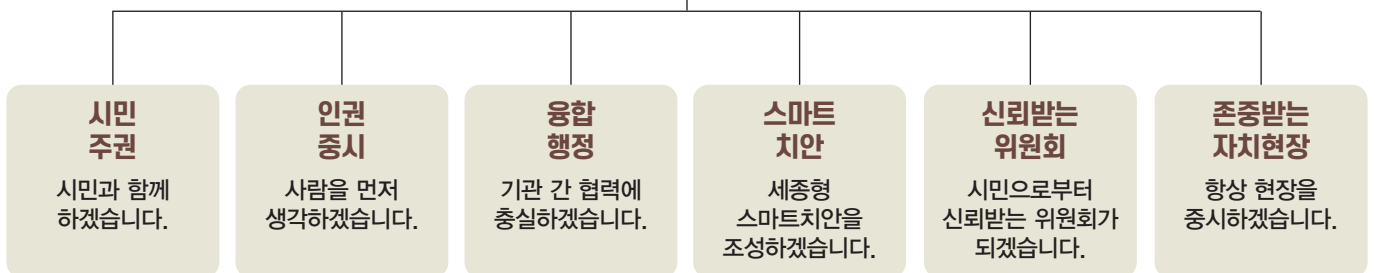
구분	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신분	상임	비상임
위원회 사무국	설치	미설치(세종청에서 업무 수행)

## 2022년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 만들기 Project

###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



###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



##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추구하는 제일의 가치는 바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정책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의 또 다른 이름처럼, '22년에도 시민이 중심이 되어 안전을 실현하는 생활안전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세종시, 특별한 자치경찰!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김상봉 위원장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와는 또다른 새로운 시험모델로서, 「경찰법」 특례조항에 근거하여 작지만 알찬 위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델도시로 출범하여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간 등 국가 중요시설과 국책연구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7년 국회세종 의사당이 개원하게 되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도시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발한 도시인만큼 주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경찰 인력과 서비스 체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1인당 지역경찰 담당인구가 전국최고 수준(약 2,000명)으로 지역경찰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순찰차량 또한 1대당 담당인구가 전국최고 수준(약 18,000명)으로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생활권 순찰수단인 순찰차량의 부족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112신고 건수가 전국 최저치로 그만큼 주민생활 치안상황만큼은 전국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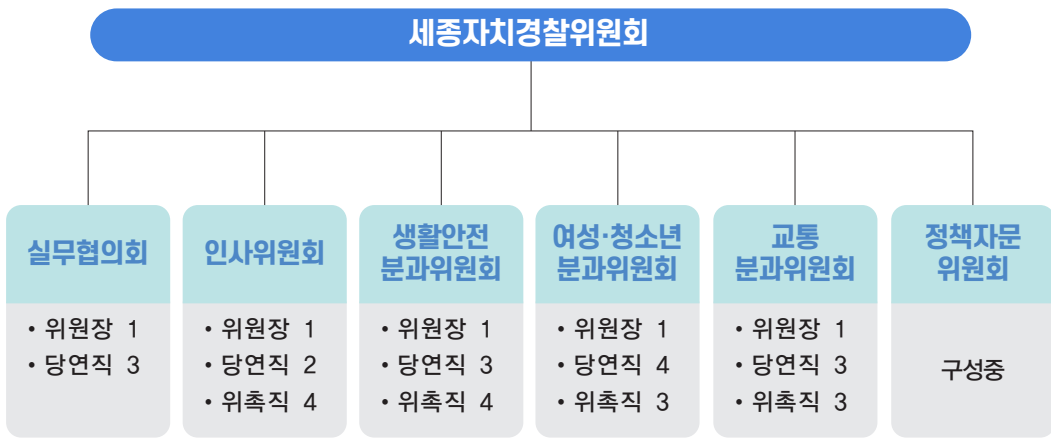
세종자치경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 출발하였습니다만, 작지만 알차게 그리고 남다른 열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엄두내기 어려운 자치경찰 인력의 **인사권**을 전부 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 인사위원회를 구성, 전체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에 의해 심의·의결을 실시하고 자치경찰 인력의 승진 및 제반 인사업무를 위상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지역경찰장(지구대장·파출소장)을 주민추천제에 의해 심의·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단위 주민대표인 주민자치회와 경찰직장협의회, 자치경찰위원들에 의해 후보자의 발표와 면접을 실시하고 추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시행 초년도('21년)에는 2개 지구대를 시범 실시하였고, '22년에는 전면시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세종시 주민들에 의한 '읍·면·동장추천제'를 모델 삼아 세종자치경찰 1호사업이자 시민주권특별시의 상징적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였고 많은 언론 등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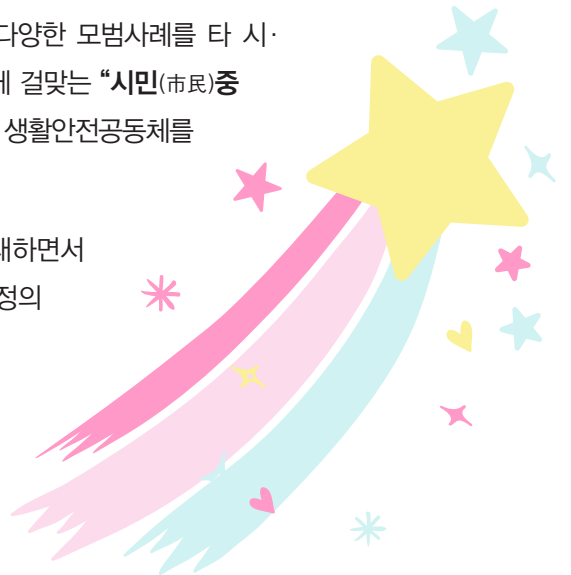


**셋째,** 작지만 알찬 위원회로 **명확한 분권체제**를 구축, 자치경찰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의 자치경찰 업무 관련 3개 **소분과를 설치**하고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청 및 교육청 관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 및 시민대표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민과 경찰행정과의 가교 및 자치경찰 업무추진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와 자치경찰 업무를 발굴하고 설계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까지 총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타 시·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자치경찰위원회도 이에 걸맞는 **“시민(市民)중심, 시민과 함께”**를 최우선 추구가치로 설정, 시민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축하기 위해 모든 전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법」 특례조항에 의한 제도적 한계를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자치행정의 마지막 퍼즐로 완성하고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이 생활안전과 자치경찰 서비스 디자인의 주인이 되며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항상 고민하고 설계하여 실행하는 열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봉 위원장 약력**

- 1967년생, 고려대 행정학과출
-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행정대학원장
-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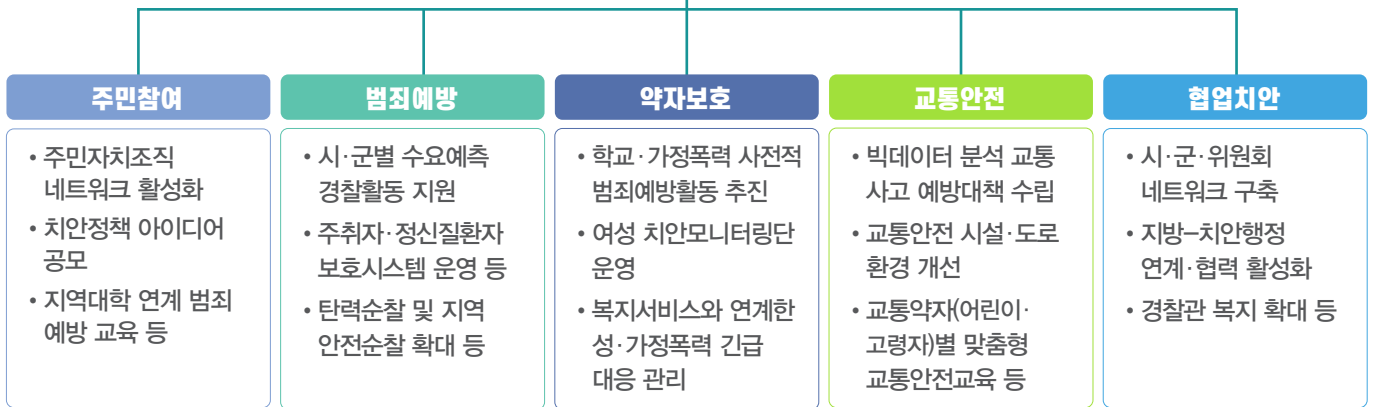
# 자치경찰 현장에서 지금

## 충남 출범 1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 개최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3. 31.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명선 충남도의회위원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노승일 충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비전 슬로건과 함께 5대 목표, 15개 추진 전략, 50개 실행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비전 실현을 위해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 주민체감·지역밀착형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실천 의지를 다짐하였습니다.



###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



## 전북 자치경찰 슬로건 제막식 개최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3. 22.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위원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건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의 슬로건을 발표하며 지역에 꼭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인천 「여성 안전을 위한 종합 치안대책」 수립·시행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21년 제1호 사업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사업에 이어 올해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 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치안대책에는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범죄취약 환경 개선 및 관리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재범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대 정책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 여성 안전 종합 치안대책(8대 정책과제)

- ①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 ②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확대 설치
- ③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 ④ 불법촬영 통합점검반 운영
- ⑤ 가정폭력 피해가정 통합솔루션·맞춤 지원 확대
- ⑥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⑦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 ⑧ 지역사회 협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 충북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추진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3. 31.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충주의료원 관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년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충주의료원 응급실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위한 기관별 협업·협조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충북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1. 10. 20. 청주의료원 내 개소를 시작으로 충주를 거쳐 향후 제천, 단양에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위한 기관간 역할 분담〉



### 대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협력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4. 5. 대구시, 대구청, 대구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년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늘어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는 대구지역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절차〉



## 자치경찰 PHOTO NEWS



### 경기남부 '22년 상반기 찾아가는 경찰서 순회교육 개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월별 주제\*를 선정하고 교수·시민단체·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강연자로 초청, 관내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대면 또는 비대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22.4.~)

\* 주제 △4월(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경찰관의 역할) △5월(CPTED) △6월(아동·노인·장애인 범죄 관련 가·피해자 심리 이해)



### 울산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 등 5개 분과 총 41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문제점과 보호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3.23.~31.)



### 서울 반려견 순찰대 업무협약 및 시범운영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강동서·강동구·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지역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방법 활동을 펼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운영(2개월)하기로 하였다.(4.18)

※ 대원 선발 4.27.까지 전화 신청한 강동구 거주민 중 간단한 심사를 거쳐 100명 선발



### 부산 자치경찰제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은 지역 대학과 경찰서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22.5.)

※ ’22. 초부터 부산대·동아대·부산외대·부산화물차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22.5.까지 부산시립정신병원·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할 예정

#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 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

도스토옙스키(Dostoevskii)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불행은 난처한 일과 말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일 때문에 생겼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제’는 어떨까요?

어느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유관기관, 그리고 현장 경찰과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업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간의 소통·협력을 위한 만남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경찰청 방문 및 경찰소통포럼 발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은 4. 6. 경찰청을 방문하여 경찰청장을 면담하고, 경찰청 지휘부(현장)와 청년경찰정책단(영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9개월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찰소통포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소통포럼 발표 내용

- ◎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및 대구시 치안 현황
- ◎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성과
  - △여성 1인가구 세이프 홈 지원사업 △대구도시공사와 CPTED 사업 추진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등
- ◎ 자치경찰제의 향후 과제
  - △정책제안 공모 등 시민참여 확대 △현장경찰과의 소통 강화 및 복지혜택 등 사기진작 등

###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국·과장급 회의 개최



경찰청 및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4. 26.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손장목 경무관) 및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서준배 교수),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과 함께 각종 진행 사항을 상호 공유·협의하였습니다.

#### 회의 주요 안건

- ◎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확대
-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방법 개선 등 대통령령 개정
- ◎ 자치경찰제 관련 교육 강화 계획
- ◎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주요 업무 추진계획
- ◎ 자치경찰사무 각 기능별 주요 정책 사항 등

##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회의 참석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손장목 경무관)은 4. 7. 서울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대구 등 6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확대 △'23년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자치경찰 예산 편성 방안 등 각종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5. 4.에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워크숍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80:20에서 72.6:27.4로 변경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 경찰청,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정담회(情談會) 참석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이동규 경정)에서는 3. 31. 전남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하여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무국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의 만남에서는 자치경찰제를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며 겪는 실무적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정담회 Q&A 주요 내용

- ◎ 자치경찰위원회와 시·군 간 협력 방안
-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도 일반직 공무원 업무 가중 및 지역별 예산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차등 우려
- ◎ 자치경찰수사사무에 대한 감사권, 위원회에 감사 관련 경찰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 ◎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집행기관인지) 등

## 전국 시·도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등 대상, '자치경찰제의 이해' 현장교육 추진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 및 추진 연혁 △한국형(일원화) 모델의 특성 △자치경찰사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설명 △재정지원 방안 △도입 성과 등 제도 전반에 대하여 정리한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영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4. 21. 울산을 시작으로 상반기(8월말)까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일반직 공무원 △시·도 일반직 공무원 △신임경찰교육생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III. 한국형(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특성

1 한국형(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특성

- 별도의 경찰 조직 신설 없이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수사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에 따라 지역·감독권 분산 (국가경찰사무 :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 자치경찰사무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경찰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사무(수사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므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야 해도 국가직 신분은 유지하며, - 경찰관 개인의 업무 수행 방식과 권한에 변화가 없어 풀 경찰관이 적용되던 때와 동일하게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경찰관 행사 가능

자치경찰  
사무

<<

국가경찰  
공무원

>>

국가경찰  
사무



#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 기고문 안내

### 자격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자치경찰 관련 무엇이든

### 제출 방법

소속·성명 기재, 별도 양식 없이 작성하여 메일(thingshyun@police.go.kr) 제출

※ 문의 :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실 경사 김범수(02-3150-3984 / 경비 8-3984)

### 제출 기한·분량

수시 제출, A4 2장 이내(사진 등 첨부 가능)

※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다음 월호에 게재됩니다.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2022년 4월

발행일 2022년 5월 4일 No. 8

발행인 손장목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편집자 여개명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

임윤상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실

김범수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실

'자치경찰 소식지'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각종 정책 수립·추진 사항을 안내·공유하기 위해 매월 온라인(PDF) 형태로 발간, 전국 경찰관 및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학회·연구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